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본격화

전북자치도, 국내 후보지 선정 따라 전담조직 구성 이달 내 사전 타당성 조사 조사 후 기재부 승인 절차 국내외 유치 붐 조성 등 국민 공감대 형성 도모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달 28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라는 낭보 속에서 승리에 도취해 인주하지 않고 발빠른 대처로 유치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됨에 따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 절차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는 3월 내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는 한국스포츠과학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6개 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수행하며, 약 3-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전북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대한체육회 승인자료,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가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문체부 및 기재부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재부 승인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문체부 및 기재부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 '지속협의' 단계에 조기 진입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정부 부처 심의 대응 △국민 유치위원회 운영 △국내외 홍보 △IOC 미래유치위원회 실사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 기본계획에는 개최 당위성과 여건 분석, 올림픽 건설 및 인프라 구축 계획, 재정 조달 방안, 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됨에 따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국내 후보도시 단독선정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유산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IOC 미래유치위원회의 질의에 대비해 6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된다. 도는 국내외 유치 붐을 조성하고,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보물 제작, 여론조사 실시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이처럼 신속한 2036 하계 올림픽 개최지 유치 선정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인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덴마크, 칠레 등 외국 10여개 국가와 경쟁해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발빠른 대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유치 추진에 매진해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서울을 꺾는 저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유치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이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스포츠를 통한 지방 균형발전,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올림픽, 올림픽을 통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추진,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문화올림픽을 통한 K-컬처 확산 등의 목적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어져 새만금의 발전은 물론 전북을 정점으로 대구와 전남, 충남 등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기장을 오가는 데 필요한 고속도로망도 신속히 신설 내지는 확충되어 전북발전에 획기적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승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IOC 미래유치위원회와도 적극 협의해 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도내 박물관·미술관 화재안전점검… "위험성 낮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박물관·미술관 3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규모 화재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는 총 8개소에서 31건의 지적 및 개선 권고 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20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주요 지적 사항은 △유도등 불량 △수신반 예비전원 불량 △소화기 위치표지판 미부착 △경계구역일람도 미비치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이만호 기자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전북에서 총 51명 선출

선거로 당선된 후보 17명… 무투표 당선인들은 34명

직접 혹은 대의원회 선출로 진행… 전북 투표율 31.4%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5일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도내에서는 51명의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들 중 34명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북 당선인 명단 7면>

이번 선거의 선출방식은 직접 선출과 대의원회 선출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선출했으며, 전북에서 직접 선출을 택한 금고는 28곳, 대의원회 선출을 택한 금고는 23곳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북 지역 이사장 후보는 17명이다.

먼저 전주시 완산구 열린새마을금고는 김성진 후보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익산지역에서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엄양섭 이사장 후보가, 익산중앙새마을금고는 소점호 이사장 후보가 당선됐다. 노인환 후보는 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정읍지역에서 정읍새마을금고는 김석주 이사장 후보가, 상명새마을금고는 안연이 이사장 후보, 감곡새마을금고는 조남훈 이사장 후보가 당선됐다.

남원지역의 경우, 남원새마을금고는 이주태 이사장 후보가 당선됐으며, 남

원중앙새마을금고는 서재석 이사장 후보가 당선됐다. 운봉새마을금고는 장수호 이사장 후보가, 지리산새마을금고는 김종관 이사장 후보가 선출됐다.

완주와 진안지역에서 완주새마을금고는 전선기 이사장 후보가 당선됐고, 진안새마을금고는 임은미 이사장 후보가, 진안동부새마을금고는 서기욱 이사장 후보가 선출됐다.

끝으로, 장수지역에서 장계새마을금고 신복철 이사장 후보가 선출됐고, 부안지역에서는 부령새마을금고 송진삼 이사장 후보, 남부안새마을금고 김영환 후보가 당선됐다.

무투표를 포함한 도내 51명의 당선인들은 향후 금고를 이끌게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북 투표율은 31.4%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 결과, 선거가 치러진 도내 17개 금고 가운데 대의원 투표가 진행된 소규모 6곳의 투표율은 90% 안팎을 기록한 반면, 일반 투표 대상인 11개 금고의 투표율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31.4%를 기록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연안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산 직도·어청도 등… 거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국토교통부가 전북 지역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10월)에 따라 지난 2월 26

일 고시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만호 기자

